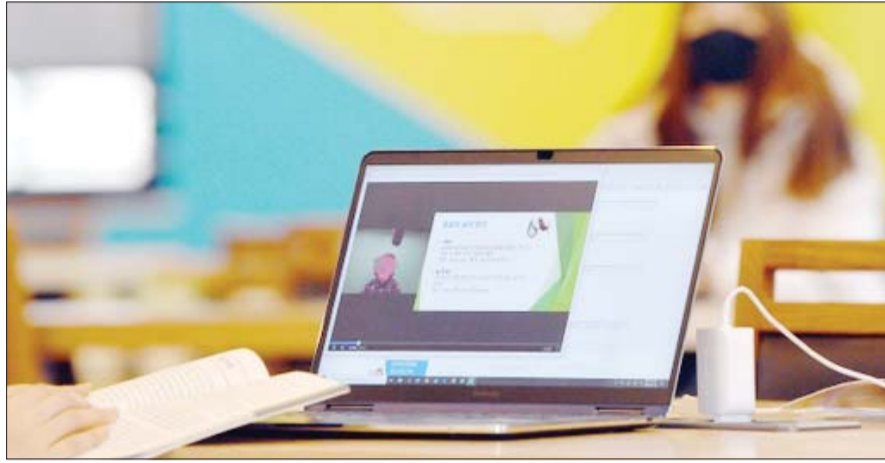


정답공유... 대리시험... 종강 앞둔 대학가, 성적산출 골머리

온라인시험 부정행위 잇따라 적발 대학, 사회봉사·성적 무효 등 징계 고려대 등 일부 대학 대면시험 결정



온라인 강의 듣는 학생 /뉴시스

중간고사를 온라인으로 치른 일부 대학에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1학기 수업 전체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한 대학가에선 기말고사와 종강을 앞두고 어떻게 성적을 산출할 것인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4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 4월 건국대 한 단과대 강의의 중간고사 때 일부 학생이 단체로 모여 시험을 보고, 대리시험을 치르기도 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학교 측이 징계 등 처리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해당 단과대학 한 교수는 최근 자신의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 "지난 4월 치러진 중간고사에서 몇몇 학생이 그룹으로 시험을 치렀고, 대리시험을 치렀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대부분 학생이 중간고사를 성실히 공부하고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해 채점이 늦어지고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앞서 인하대 의과대학 학생들도 온라인 단원평가와 중간고사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끼리 SNS 대화방을 통해 정답을 공유하거나 2~3명씩 모여서 함께 시험을 본대 이어 중간고사도 같은 방식으로 치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학생의 제보로 학

교 측이 조사를 벌인 결과, 1·2학년 학생 109명 중 91명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이들을 전원 0점 처리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인하대는 지난달 4월 치러진 공과대 교양 필수과목 중간고사에서도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면서 구글에서 검색한 자료를 그대로 답안으로 제출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서강대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당초 학교 측은 코로나19 감염 우려

로 1학기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중간고사도 보지 않기로 했다. 다만 교수의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시험을 진행하도록 했고, 중간고사를 치른 일부 중 한 과목에서 학생들이 실습실에 모여 함께 시험을 치렀다는 제보가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오기 시작했다. 총학생회가 학교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학교 측은 부정행위 정황을 파악해 이들의 시험을 무효 처리했다.

서강대 관계자는 "온라인 시험인데 함께 모여서 시험을 치른 자체가 정당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중간고사를 무효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대학이 코로나19 여파로 중간고사를 온라인으로 치른 상황에서 학생들의 부정행위가 잇달아 적발되면서 대학가에서는 부정행위가 실제로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 예상도 나온다.

앞서 한양대에서는 온라인 시험을 대신 바주겠다는 글이 학생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했고, 연세대에서도 한

교양과목 온라인 쪽지 시험을 보면서 학생들끼리 정답을 공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것이라 예상이나 오면서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부정행위 차단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각 대학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의과대학생들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인하대는 기말고사를 대면으로 치를 예정이다. 고려대, 경희대, 중앙대 등도 대면시험을 원칙으로 정했다.

화상시험감독을 강화하고 시험 문항을 서술형으로 출제해 최대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겠다는 대안도 내놴다. 성균관대는 온라인 시험을 유지하면서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응시생의 신분을 확인하고 시험을 감독할 예정이다. 또한, 교수들에게 단답형 대신 서술형 문제를 내도록 독려했다. 연세대도 온라인 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단순 암기나 자료 검색으로 풀수 없는, 창의적 문제를 출제해 달라고 권장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교육부, K무크 선도대학 14개교 선정

서울대·고려대 등 134개 명품강좌 무료수강

K무크, 2015년 시작 745개 강좌 제공
코로나 상황반영, 의료·간호강좌 다수

일반인 누구나 온라인으로 무료 수강할 수 있는 대학의 134개 명품강좌가 올해 하반기 추가로 선보인다. 교육부는 4일 '2020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무크) 선도대학 및 신규 강좌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K무크(K-MOOC; Korea Massive Open Online Course)는 대학이나 기관의 우수 온라인 강의를 일반인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무료 수강하도록 한 서비스로 2015년 시작돼 현재 745개 강좌가 제공 중이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원격수업이 활성화되면서 3~4월 수강신청 건수는 17만9000건, 회원 가입자 수도 8만5000명으로 대학과 학습자의 관심이 크게 상승했다.

K무크 선도대학으로는 온라인 강좌 개발역량과 기반이 풍부한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경성대, 고려대, 단국대, 대구대 등 최종 14개교가 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향후 3년간 새로운 주제와 형태의 과급력있는 명품강좌를 개발

〈2단계 무크선도대학〉 기관명 가나다순

대학명	주요 개발 분야
경성대	지역밀착형 문화예술분야
고려대	4차산업혁명, 시민의식 함양
단국대	스마트워크, 스마트교육
대구대	재활전문인력양성, 사회재난
대구한의대	한방 K뷰티
서강대	미래사회 필수역량
서울대	기초학문분야, 교내 30위 이내 인기강좌
성균관대	인문학, 예술, 융복합
세종대	소프트웨어, 컴퓨터공학·예술미디어
울산대	산학협력, 의학분야
이화여대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연과학, 여성학
전남대	인공지능 융합학문, 한국의 민주화과정
중앙대	의료·헬스케어, 문화와 예술, 인간과 기술
포항공대	이공계 분야

/교육부

하고, 국내 대학의 학점인정·교류 활성화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확대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서울대와 고려대 등에서 신종바이러스 이해, 건강보건 증진, 전염병 대응 음압 병실 체험 등 의료·간호 분야 강좌를 다수 선보일 예정이다.

신규 강좌로는 ▲인공지능(AI)강좌 8개, ▲목음강좌 6목음(28강좌), ▲개별강좌 40개 등 총 76강좌가 뽑혔다. 인공지능강좌는 기초수학, 고급 기계학습, 알고리즘 등 8강좌를 선정하였으며, 인공지능강좌 이수체계도(2020년 2월 마련)에 따른 강좌 제공을 완성하기 위하여 6월 중에 추가로 공모할 예정이다.

기초부터 심화까지 체계적 학습을 지원하는 목음강좌는 웹스토리작가, 미세먼지전문가,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국제 개발협력 전문가 양성과정 등이 선정되어, 취업준비생, 재직자, 대학생 등이 취·창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이번에 선정한 K무크 선도대학과 신규 강좌 개발 기관이 새롭게 개발한 강좌를 올해 하반기에 제공할 예정이다. 강좌는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 후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한용수 기자 hys@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4일 강사법 시행령 공포 1년을 맞아 강사책임용 절차 개선, 전임교원 강의 상한제 등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강사법 1년... 강사책임용 개선 등 대책 시급

비정규교수노조 기자회견

“코로나 시국에 맞는 절차 필요
전임교원 강의 상한제 도입”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4일 강사법 시행령 공포 1년을 맞아 강사책임용 절차 개선, 전임교원 강의 상한제 등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강사법 시행령 공포 1년, 특단의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법은 대학강사의 고용안정, 권리보호와 처우개선 더 나아가 고용확대를 피하고자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 탈락 기준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등 강사법 취지에 어긋나는 대학이 많다"면서 "법적 교원인 강사를 전임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적으로 평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코로나 19 시국을 반영해 강사책임용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대학의 책임용심사기준이 정상적인 면대면 강의를 기준으로 제정돼 코로나 19 시국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온라인 수업에 투입되는 교육 강도는 평상시 수업의 2~3배에 달하지만,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장비도(대학은)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면대면 강

의실 수업을 기준으로 제정된 강의 평가와 책임용 심사 기준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책임용은 강사법 시행 이후 첫 번째 책임용이다. 강사법은 신규임용을 포함해 3년간의 책임용 절차를 보장했다. 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여 교육과 연구 활동을 돕기 위해서다.

노조는 "교육부는 코로나 여파로 책임용탈락 강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에 선제적 조치를 해달라"면서 "대학 또한 책임용에 탈락할 경우 소청 심사가 뒤따르는데 이 같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소형 강의를 확대해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학생 졸업이수 학점 하한제, 전임교원 강의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놴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최근 소형 강의를 중심으로 대면 강의를 시작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과거 대형 강의를 늘려왔던 대학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수업이 이어지며 학생들의 불만이 쇄도하자 교육지책으로 실시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번 기회에 대학 재정을 확충해 소형 강의를 늘리고 교육다운 교육으로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학 졸업이수학점 하한제와 전임교원 강의시수 상한제를 시행해 교육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현진 기자

승실대 노동조합, 장학금 7000만원 출연

1990년 창립, 238명에 2.3억 장학금
불우이웃기금으로 취약계층 지원도

승실대 직원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위해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았다.

승실대는 지난 1일 총장실에서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승실대학교지부(지부장 전영석, 이하 승실대 노동조합)가 장학금 7000만원을 출연했다고 4일 밝혔다.

1990년 4월 '승실의 민주화와 직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창립된 승실대 노동조합은 1998년부터 직원 추천 장학금을 통해 현재까지 총 238명의 본교 학생에게 총 2억 30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또한, 1997년부터 불우이웃기금으로 동작사회복지관, 희망동네 등과 연계해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무의탁 노인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